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2021. 6.

금 융 위 원 회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가. 제 · 개정 이유

- 법률상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정의 개정에 따른 시행령 조문 정비
-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수행중인 복지수급 대상자 발굴·연계업무를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으로 추가

나. 제 · 개정 내용

- 시행령 제3조제1호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이 개정 서민 금융법 제2조제5호사목에 포함됨에 따라 시행령 제3조제1호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사회보장 연계 사업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수행중인 사회보장 연계 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수행기관 추가(안 제4조제2호바목)

가. 제·개정 이유

- 전통시장 상인회를 진흥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제4조제2호바목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를 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로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전통시장 상인회가 진흥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민금융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운영위원회 추천기준 마련 및 조문 정비(안 제13조의2, 제14조)

가. 제·개정 이유

- 개정 서민금융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위임된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2개 금융협회를 규정할 필요
- 개정 서민금융법 제9조제1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나. 제·개정 내용

- 금융협회 소속 금융회사의 출연금 누적규모가 가장 큰 2개의 금융협회의 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을 각각 추천
- 제14조 인용조문을 서민금융법 제9조제2항제2호 마목으로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운영위원회 추천권을 갖는 금융협회 설정기준 명시
- 법률 조항 신설에 따른 법체계상 조문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사업수행기관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관련 조문 정비 (안 제20조)

가. 제 · 개정 이유

- 서민금융법 제27조 개정에 따라 시행령상 인용조문을 변경할 필요

나. 제 · 개정 내용

- 개정 서민금융법 제27조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개정에 따른 법체계상 조문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5.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정비(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가. 제 · 개정 이유

- 개정 서민금융법 제29조의2에서 위임된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나. 제 · 개정 내용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제반 활동을 그 업무로 함(안 제22조의2)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는 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명하는 1인 및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으로 구성하며, 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22조의3)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의 위임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유사입법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수출 지원센터의 설치)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소재 등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수출지원기관의 직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수출 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서생략)

1. 삭제
2. 중소기업부
3. 삭제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에 따른 신기술 보육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 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같은 법 제41조 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 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11. 「무역보험법」 제37조 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12.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15.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6. 그 밖에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 중에서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

제3조 (수출 지원센터의 기능) 수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역거래알선·수출신용보증·무역보험·수출입금융 등 중소기업의 수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2. 수출신용보증·무역보험 및 수출입금융에 대한 지원
3. 기술·디자인 및 품질의 개발·향상을 위한 지원
4.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도 및 정보 활용 능력 등 무역활동 관

련 역량의 진단 및 역량별 맞춤형 지원

5. 수출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간 수출정보 공유 및 협력 기회 부여
6. 중소기업의 무역활동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무역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수출 지원센터 의 장은 관할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출지원협의회(이하 "수출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의 공유
 2. 수출지원기관간 협력할 사항의 발굴
 3. 그 밖에 수출 지원센터의 장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수출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수출지원기관 소속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 담당자
 2. 수출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 (외국인투자 지원센터의 설치)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 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투자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투자 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투자 지원센터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제2항에 따라 투자 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

이라 한다)은 투자 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관에 대하여 승진, 전보, 포상, 후생복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삭제

⑨ 투자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외국인투자 지원센터의 운영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그 복무에 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의견서를 송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 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견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종합행정지원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투자유치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고, 파견관에게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고충처리전담요원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기별 투자유치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99.10.27]

⑥ 삭제 [99.10.27]

⑦ 삭제 [99.10.27]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6. 휴면예금 원권리자 자료 조회 기관 정비(안 제40조)

가. 제 · 개정 이유

- 개정 서민금융법 제2조의 ‘금융협회’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 금융위 고시에서 휴면예금 자료조회 기관으로 명시된 금융결제원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을 자료조회 기관에 추가하여 원권리자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나. 제 · 개정 내용

- 개정 서민금융법 제2조제8호 각 목의 금융협회 정의와 일치하도록 용어정비
- 휴면예금 원권리자 자료 조회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결제원과 금융감독원을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휴면예금 원권리자 자료 조회 기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7. 서민금융보완계정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안 제42조, 별표1)

가. 제 · 개정 이유

- 개정 서민금융법 제46조는 신용보증을 통한 서민금융 필요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을 설치하고,
 - 동 계정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공통출연 및 보증이용 출연의무를 규정(개정 서민금융법 제47조)
- 개정 서민금융법 제47조의 위임사항의 규정 및 한시출연을 전제로 한 현행 시행령 규정 삭제 등 조문정비 필요

나. 제 · 개정 내용

- 법개정에 따라 보증계정의 명칭을 서민금융보완계정(약칭 ‘보완계정’)으로 변경(제1항)
- 금융회사등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서민금융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출연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규정하고(제2항 및 제3항)
 - 출연비율을 연 1천분의 0.3으로 정하고 다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요율 차감 (제4항)
- 서민금융법 제47조제3항의 금융회사 중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이하 ‘출연금융회사등’)는 해당 신용보증 금액에 대해 연비율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1의 출연금 요율에 따라 출연 의무를 부과(제5항)

- 출연금융회사등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과 신용보증 금액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을 익월 말일까지 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상호금융조합 등은 소속 중앙회 등을 통해서 출연하도록 규정(제6항)
- 출연금계산서 등 출연금융회사등이 시행령 개정안 제6항에 따른 출연금 납부 시 진흥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규정하고(제7항)
 - 개정 서민금융법에 따른 출연제도 변경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6항 내지 제8항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금융회사 출연제도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출연금융회사 등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보완계정의 원활한 재원 조성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타 입법례(「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대출금의 범위) ①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기준대출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다.

1.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 가. 은행계정 중 대출채권
 - 나. 신탁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대출금
 - 2) 사모사채(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에 한한다)

- 3)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에 한한다)
- 4)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에 한한다)
- 다. 종금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할인어음
 - 2) 할인무역어음
 - 3) 팩토링어음
 - 4) 지급보증대지급금
 - 5)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 가.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 1) 원화대출금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 가)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 나) 가계자금대출금
 - 2) 외화대출금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 가) 시설자금대출금
 - 나) 금융회사등이 외국에 설치한 지점·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현지에서 대출한 대출금
 - 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등이 그 기업의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것
 - 3) 내국수입유산스
 - 4) 역외외화대출금
 - 5) 콜론
 - 6)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을 제외한다)
 - 7) 매입외환
 - 8)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을 제외한다)
 - 9) 직불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을 제외한다)
 - 1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1) 팩토링채권(금융회사등이 외상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것을 제외한다)
 - 12) 출자전환채권
 - 13) 금대출
 - 나.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 1)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 2) 가계자금대출금
- 다. 종금계정의 할인어음과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2)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어음관리계좌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나) 어음관리계좌 유가증권

다) 어음관리계좌 예금

라) 어음관리계좌 기타운용자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 또는 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

마. 차관자금대출금

바. 금융회사등 간의 대출금

사. 금융회사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보증을 한 대출금(신용보증기금이 금융회사등에 위탁하지 않고 10년 이상 직접 신용보증을 해오다 금융회사등에 신용보증을 위탁한 대출금은 제외한다)

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대출금의 용도를 특정한 수출거래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출하는 것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대출금을 제외한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금출연기준대출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정출연기준대출금

차.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대출금

카.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타.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파.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대출금

하.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금 중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원화대출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너.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대출금 중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더. 법률 제3930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산형성저축가입자에 대한 대출금

러.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 중 이자가 감면되거나 이자의 징수가 유예되는 대출금

머.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출하는 대출금

버.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또는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대출하는 대출금

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 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업무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한정한다)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저. 어목에 따른 대출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목에 따른 대출업무에 따라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포함한다)의 재원이 되는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처.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합병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의 대출금(합병등기일 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그 대출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 대출금을 포함한다)

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②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8. 개정 서민금융법에 따른 연체보증료율 산출기준 마련(안 제44조)

가. 제 · 개정 이유

- 개정 서민금융법 제52조가 타 공공기관, 입법례와 같이 ‘연체보증료’ 수령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

나. 제 · 개정 내용

- 개정 서민금융법 제52조제3항의 ‘연체보증료’를 개인의 신용도, 보증종류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料率)에 따라 산출하도록 함*

* 현행 보증료율 산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44조에 법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연체보증료를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의 위임에 따른 연체보증료 요율 산출기준 규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9. 법률의 위임에 따른 자활지원계정 조성 자금 규정(안 제47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개정 서민금융법 제55조의2제2항 제8호의 위임에 따른 자활지원계정 조성 자금을 규정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진흥원의 다른 계정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을 자활지원계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에 정해진 자금 외에 일시적인 자금경색 시 진흥원의 다른 계정 또는 금융회사 차입을 통해 자활지원계정을 통한 사업수행의 지속성·안정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0. 자활지원계정 준용규정 신설(안 제47조의3)

가. 제 · 개정 이유

- 보증한도, 보증료, 보증채무 이행청구 사유, 구상채무 면제 및 손해금 등 자활지원계정에서 수행하는 보증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할 필요

나. 제 · 개정 내용

- 보완계정의 보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규정된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 47조 규정을 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도 준용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활지원계정 보증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1. 채무자지원센터 관련 조항 삭제(안 제49조, 제56조)

가. 제 · 개정 이유

-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채무지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제77조)이 삭제*되었는바 시행령 관련 조항도 삭제할 필요

* 법 제29조의2 신설을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

나. 제 · 개정 내용

- 채무자지원센터 관련내용을 규정한 현행 시행령 제49조, 제56조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삭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2. 신용회복위원회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방법 변경(안 제52조)

가. 제 · 개정 이유

-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신용회복위원회 결산서 제출 방법이 변경되었는 바 시행령 관련 조문도 변경할 필요

나. 제 · 개정 내용

- 개정 서민금융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 개정에 따른 법체계상 조문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방법 변경(안 제53조)

가. 제 · 개정 이유

-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상담수요에 대응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채무조정 신청 방법을 다양하게 허용할 필요

나. 제 · 개정 내용

- 개인채무자가 신복위에 채무조정 신청 시 서면(전자문서 포함) 외에도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채무조정 이용자의 이용 편의성 증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유사입법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5조(신청 방식) ① 조정의 신청은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다.
②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 추가(안 제55조제1항제16호)

가. 제 · 개정 이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에서 제외되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나. 제 · 개정 내용

- 제55조제1항제16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에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신용회복지원 협약가입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신용회복지원 효과 및 재기지원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 ⑨ 생략)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정비(안 제58조)

가. 제 · 개정 이유

-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률 조항에 맞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조문을 정비할 필요

나. 제 · 개정 내용

-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의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문 정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6. 주민등록사항 등 공공데이터 제공요청근거 구체화(안 제59조)

가. 제·개정 이유

-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진흥원, 신복위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관련기관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진흥원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자금대출·신용보증사업, 휴면예금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복위가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파산 절차 지원 업무에 한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서민금융 이용자의 서류 준비 부담 완화 및 이용편의성 증대
- 최신 주소를 활용한 권리자 통지를 통해 휴면예금등 반환 촉진

마. 국회 계류 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7. 현행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출연 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2조)

가. 제 · 개정 이유

- 서민금융법 및 금융회사 출연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42조 개정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출연의 지속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나. 제 · 개정 내용

- 종전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진흥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라 출연 의무를 부담
- 종전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출연이 종료된 후에 개정 규정에 따른 출연을 시작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시행령 제42조 개정에 따른 종전 규정과의 관계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18. 신용보증금액 기준 출연 의무 관련 적용례 규정(안 부칙 제3조)

가. 제 · 개정 이유

- 개정 서민금융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진흥원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출연 의무를 부과 받는바, 신용보증금액 계산을 위해 적용례를 명확히 할 필요

나. 제 · 개정 내용

- 법 개정에 따라 진흥원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금융회사가 출연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되는 신용보증금액은 영 시행후 금융회사가 진흥원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금액부터 적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신용보증금액 기준 출연 의무 관련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